

‘인력난 가중’ 주52시간제 등 中企 규제완화 목소리 커진다

빨라지는 ‘대선 시계’

노동·신산업·환경·인증 등
업계 규제개선 현안 수면위로
중처법·최저임금 개선 목소리
중소벤처부 역할 강화 이슈도

탄핵 결정으로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중소·벤처·소상공인업계가 숙원했던 규제 개선 현안들을 서서히 수면위로 꺼내고 있다. 6월초 예정된 조기대선을 앞두고 ‘9981(기업의99%, 종사자의81%)’을 차지하는 경제 주체의 발목을 잡는 노동, 신산업, 환경, 인증 등 각종 규제를 정치권과 정부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전달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 강화 및 산하기관 기능조정 이슈도 대선 과정에서 대두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미국 트럼프-북한 김정은 및 남-북간 대화 재개로 개성공단 재가동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이슈 중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노동분야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더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제조현장에선 인력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 또 대표이사 대다수가 오너인 중소기업 현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소공연

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너무 과도하다는 하소연이다. 최저임금제도 개선도 마찬가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 52시간제는 고쳐야 한다. 연장근로가 ‘주단위’로 제한되어 있어 현장에선 이를 유연하게 활용하지 못한다. ‘월’이나 ‘연’으로 단위를 확대해야 한다.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만으로 가능한 ‘특별연장근로제’를 중소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현재 ‘1년 이상 징역’을 하한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처법의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며 이를 ‘상한형(ex 7년 이하)’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규제를 건의하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30일 이내 답변하는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구축해 현재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업계에에선 현행 단일 체계인 최저임금을 업종 등의 특성에 따라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미만율(평균 13.7%)의 경우 농림어업(43.1%), 숙박음식점업(37.3%), 기타 서비스업(25.3%) 등에서 높아 업종별,

규모별로 차이를 뒤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노동계와의 갈등 우려 등을 이유로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다.

벤처업계는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는 벤처생태계의 현실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등은 지난 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규제장벽 ▲노동경직성 ▲벤처금융 한계 ▲자금 유동성 악화 등으로 기술창업 감소, 벤처투자 위축, 혁신성 저하, 경쟁력 약화, 회수시장 침체 등 벤처생태계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 기준국가 목표 설정 ▲벤처기업 요건 개선 ▲고성장 벤처기업 특화지원 ▲첨단업종 벤처육성을 위한 입법·R&D 지원 강화 ▲모험자본시장 확대 및 제도화 ▲혁신적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개선 우선지원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한 중기부가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화와 R&D 지원 강화를 위해 코트라(KOTRA),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중기부 이관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6년 2월10일 박근혜 정부의 전면 중단 결정으로 내년이면 ‘폐쇄 10년’이 되는 개성공단 논의 재개 기대감도 일부에서 일고 있다.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은 “개성공단의 문을 다시 연다면 들어갈 것이다.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 나도 대체 생산을 위해 베트남에 공장을 차렸지만 개성만한 곳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공단을 재개한다면 한국기업만으로는 안된다. 글로벌기업들도 같이 들어가 국제화공단을 만들어야 지속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출신으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를 지낸 김경만 전 의원은 “중기벤처소상공인 분야는 공정, 상생, 성장, 혁신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의 교섭력을 강화해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이며 납품단가 연동제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펀드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가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보 등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들 정책금융기관들은 경제가 어려운 댄파이프라인으로 선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탄핵선고’ 영향 제한적... 금리·규제·수급 등이 핵심변수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정치 이벤트보다 실질변수가 중요
공급전략 측면 하반기 집중 가능성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단락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신중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치 이벤트보다는 금리, 대출, 공급 등 구조적 변수가 향후 시장 방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압·여·복·성(압구정·여의도·복동·성수)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다.

시는 “정비사업 대상지 해제 시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크다”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에 대해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설정을 재지정했다.

정책이 다시 규제 기조로 선회하면서 일부 시장 수요는 비아파트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단 2건뿐이었지만 같은

기간 연립·다세대 주택은 13건이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은 정치보다 구조적 변수에 있다고 보고 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6일 “정치 불확실성이 정리된 이후부터는 실질 변수가 중요하다”며 “부동산 시장은 정치보다 금리, 대출, 규제, 수급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허구역 해제 당시 신청된 주택담보대출이 4월부터 실행되며 가계 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며 “정부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

R) 3단계 시행 이후 기준금리 인하 여부 부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급 전략 측면에서도 하반기로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 수석은 “정책 방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장 반응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기다릴 수 있다”며 “하반기, 특히 9월 이후 분양이 집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리와 공급 변수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가운데 청약 시장에서는 실수요 기반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인천계양과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본청약 분양가는 사전청약 대비 각각 18%, 15% 상승했지만 고양

창릉 S5블록 전용 84㎡는 40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탄핵 선고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정권 유지 여부에 따라 정책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3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정비 같은 중장기 정책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은 장기 계획인 만큼 일시적인 정치 변수로 중단되긴 어렵다”며 “시장에 영향을 줄 핵심은 향후 금리, 대출 규제 등 구조적 변수의 조합”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의료 비상계엄도 해제하라”... 윤석열 표 정책 중단 요구

의료계 분위기

전국 의사결기대회 등 투쟁 시사
교육 가능 수준 정원축소 촉구

‘윤석열 표(標) 의료정책’이 갈림길에 섰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이후, 의료계가 윤 전 대통령이 시행한 의과대학 증원 등의 의료정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시사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의협을 비롯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서울특별시 의사회 등 의료단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직후 의료 비상계엄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 로드맵을 공개했다.

의협은 “이달 13일 오후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소집하겠다”면서 “20일 예정으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결기대회를 통해 조속한 의료환경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정부가 빠르게 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의사결기대회는 서울 여의도나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혁위) 해체, 의정갈등 책임자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개혁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윤 대통령 독단으로 실행된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대화를 요구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그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제 수습의 시간으로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엄을 즉각 해

제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 개혁 정책들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축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사회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수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국민을 ‘처단’한다는 위험적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료 개혁을 방자한 참극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재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만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